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6월

“농산물 수출 마케팅 아시아, 북미, 러시아에 집중해야”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6월 17일 개최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6월 1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6월 1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농식품 수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것을 기점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된 반면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원장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수출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심포지엄을 통해 건설적인 발전 방안이 모색되길 당부했다.

농식품 수출 잠재 시장 넓어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농업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악한 우리 농식품이 수출확대를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말하며, 심포지엄을 통해 농식품 수출방안이 마련되길 당부했다.

이어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세계 농산물 잠재 수출 시장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유망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규모와 지역별 시장 분포, 수출 경쟁국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18배에 이르는 넓은 수출 잠재시장이 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현재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은 유럽이지만 향후 농산물 수출 마케팅은 잠재력이 큰 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러시아에 집중해야 하고, 수출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과일과 같은 품목은 미국과 중국이 최대경쟁국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경쟁국에 비해 높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아도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농식품 수출 및 지원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

에서 지난해 농식품수출이 크게 늘었지만 수출 품목 중 신선식품 비중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농식품 수출 관련 여러 정책 간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위한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 필요

농식품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출대표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주장하며,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자·종묘비 절감과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김연중 연구위원은 밝혔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2008년에 가공식품은 총 22억 불을 수출했으나 향후 가공 식품 및 식재료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농가나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배려하는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사회로 열려, 한국농림수출입조합 고재갑 전문이사, (주) 경남무역 김영도 부장, 농림수산식품부 김홍우 식품산업진흥과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남상원 수출개발처장, (주)로즈피아 정화영 대표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서 농식품 수출관계자들은 수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농식품수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발전 위해 비전을 품고 변화 추구해야”



6월 월례대회에서 서울대 박동규 명예교수가 ‘비전을 갖고 변화하자’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연구원은 6월 1일 대회의실에서 월례 회를 가졌다. 오세익 원장은 ‘변화와 비전’이라는 제목의 회를 통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열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남은 2009년 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매진하길 당부했다.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전을 갖고 변화하자’라는 주제 강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우리 농촌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걸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며, “깊이 사고하며 본질을 토대로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기쁨과 즐거움, 보람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며, 삶의 본질에 대해 늘 생각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부탁했다.

농업통상팀, 지역산업팀 농식품부와 워크숍 개최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농업통상팀은 6월 15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국과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농림수산물부 김신재 사무관이 ‘FTA 농업협상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정부는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국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EU

외는 핵심사안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이고 중국과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연구원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농업부문 FTA 이행경과 및 영향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제 FTA 발효 후 이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농업부문의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FTA 체결 전후 주요 민감품목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후 영향평가 방법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현재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과 사후적 영향분석을 위한 변수에 대한 논의와 FTA 평가관련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우

리 연구원 농업통상팀과 농림수산물부 국제협력국은 농업통상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기로 하였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지역산업팀은 6월 16일 과천에서 ‘경영조직의 이슈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 직원들과 우리 연구원 지역산업팀 연구자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경영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의 발표에서 현재 농업경영의 현상을 짚어보고, 소득·식량·농지 측면의 3대 농업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경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한국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사례로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을 갖고 향후 농림수산물부와 우리 연구원 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쇠고기 원산지 효과 평가’ KREI세미나

연구원은 6월 23일 오글라호마주립대 정찬진 교수를 초청, 중회의실에서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의 품질 특성과 원산지 효과 평가’라는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 순천에서 제3차 현장토론회 개최



순천대 7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6월 26일 제3차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6월 26일 순천대학교에서 제3차 KREI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익 원장, 임상규 고문 등 연구원 관계자와 김병무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장,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과 품목별 생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친환경

농산물의 적정 시장가격, 지역 브랜드 단일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오세익 원장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구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광역친환경 단지 축분자원화시설, 순천농협 남도김치 공장, 파머스마켓 등 농식품 현장을 방문했다. KREI 현장토론회는 농촌 현장에서 우리 농업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지난달 22일에 강원도 홍천과 평창에서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농산물 수출 잠재력 키, 시장별 마케팅 전략 필요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농산물은 지금의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와 같은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1950년대 초기 우리나라 산업 시설은 6.25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신발, 옷가지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생필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수입을 위해 우리가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농수산물과 광산물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62년, 우리나라 수출 총액은 5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지난 해 우리나라 수출 2,844억 달러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한 숫자이다. 그러나 당시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3.1%였고, 여기에 수산물을 합치면 그 비중은 65.5%에 달했다. 이후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이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출을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농업의 생존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개발 초기와 같은 농업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농산물 수출은 외화 획득을 위해서보다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시장 확대와 농업인의 자신감 고취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제 농산물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 사과와 감귤의 교역 규모는 660만 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18배에 달한다.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다른 과일의 국제 교역 규모도 우리나라 생산량의 5배에서 9배에 달한다. 닭고기와 돼지

고기의 교역 규모는 각각 우리나라 생산량의 10배, 18배 수준이다. 쌀의 교역량은 2천만 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4배에 이른다. 교역액으로 보면 돼지고기 180억 달러, 닭고기 93억 달러, 쌀 71억 달러, 절화 59억 달러에 이르고 교역액이 적은 오이와 복숭아의 경우도 15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 북미, 아시아가 중요시장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이다. 쌀,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EU에 속하지 않은 러시아는 신선 농산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는 사과와 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감귤, 복숭아, 포도의 수입 규모는 세계 3위이다. 닭고기 수입 규모는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4위이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국은 미국, 중국 이외에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이 포함되지만 결국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 될 것이다.

유럽 다음으로 큰 시장은 북미와 아시아로 품목에 따라 2위와 3위 위치를 나누어 점하고 있다.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수출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미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포도 수입량이 세계 1위이고 배, 감귤, 복숭아 등의 수입 규모도 세계 10위 이내에 든다. 미국은 우리나라 배의 중요한 수출처로 신선 과일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

은 화훼류, 버섯 등 원예작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중요한 수입국이다. 중국은 최근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활용할 경우 우리 농산물의 수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남반구 국가는 수확기의 차이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경쟁해야 할 가장 큰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다. 예를 들면, 과일의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경쟁할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고,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이다.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중국이다.

최대 경쟁국은 미국과 중국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가격경쟁력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수출국들에 비해 3~4배 높은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사과 수입 가격은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1/10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 가격은 중국보다 비싸고 기타 서양배 수출국 가격보다 2~3배 비싸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지리적 이점, 품질과 품종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이러한 가격경쟁력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세계 농산물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은 존재한다. 목표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국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농산물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R**



농산물 값 급등, 남의 탓이 아니다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올 봄에도 몇몇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었다. 배추는 5월 중순에 한 포기 5천원이나 하여 '금치'를 담가야 했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작년보다 두 배 정도나 값이 올라 '금겹살'을 먹는다고 주부들이 비명을 질렀다.

6월 들어 몇몇 농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배추를 비롯하여 노지채소는 산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평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육류는 사료비 부담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그런대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성출하기에 진입한 과채류들도 대체로 예년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참외와 수박은 제철을 맞아 연중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계절성이 강해 가격 변동 불가피

농산물은 계절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배추는 봄철에 가격 파동을 겪는다. 시기적으로 겨울 배추의 출하가 종료되고 고랭지 배추가 나오기는 이른데다 지난해 담근 김장김치가 동이 나는 때이기 때문이다. 올 겨울에는 저장 배추마저 부패가 심해 봄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공급이 달리면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은 소비량이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이 곧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저장이 어려운 신선 농산물일수록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량 조절이 필요한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생산자가 많고 소규모라는 점이다. 쌀은 자급 농가를 포함하여 약 85만 호나 된다. 둘째, 일단 재배(사육)가 시작되면 생산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으며, 생산 기간이 짧은 육계라도 40일이 지나야 다음 영농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셋째는 자연친화화 지역성이다. 대부분

의 노지작물이 기상 조건에 따라 풍흉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예를 들어 배추는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생산되고, 한여름에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되므로 인위적인 조절이 쉽지 않다.

가격 급등, 농업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에는 전업농이 늘어나고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과학적인 영농과 경영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인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는 사업가로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개방 시대에는 가격이 높으면 바로 수입이 이루어지므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가격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천정을 형성하여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크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에 이상이 생겼다. 환율 상승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부진한 데다 사료와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생산비가 상승하였다. 쇠고기 수입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산동성의 김치공장들도 수출 경쟁력을 잃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국내 농가가 크게 덕을 본 것도 아니다. 삼겹살 값이 올랐지만 양돈농가 대부분이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시설원예 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작물을 포기하였다.

영농기술이 발전된 요즘에도 "풍년거지가 더 싫다"라는 말이 있듯이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월에 월동 대파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도매시장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폐기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급등하면 비명을 지른다지만, 특정 품목에 생계를 걸고 있는 농업인들은 가격 폭락으로 곡소리가 난다.

농산물 가격이 심하게 등락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 등락이 심하면 농업경영자는 중장기 영농계획 수립을 꺼리고 단기적인

투기적 생산에 치우치기 쉽다. 주부들도 계획적인 가계소비가 불가능하여 소비를 줄이게 되고, 가격불안 심리로 인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이 정착되어야 한다. 배추 값이 너무 오르면 배추김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열무나 갓 또는 양배추를 김치 재료로 사용하는 식으로 고물가 시기를 현명하게 넘기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계절 농산물의 성출하기에는 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조금씩 더 소비해주는 아량도 필요하다.

가격 안정 위한 농·소·정 공동노력 필요

농업인들은 습관적인 영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올해 배추 값이 좋았다고 내년에도 너도나도 배추 농사를 늘린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농협의 계약재배나 출하약정사업에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논 경지정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밭작물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과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저장시설 등의 유통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산물의 안정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 농산물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품종 개발, 대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요리법 개발 등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9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을 통해 매일 품목별로 수급 동향과 가격 예측을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소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가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계 등에 널리 활용되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웃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 농정철학이 있는가?

김 수 석 연구위원

지금까지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농업철학 내지 농정철학을 깊이 있게 고민해본 적이 별로 없다. 이는 농업정책 연구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반 산업부문이 지향하는 목표인 '경쟁력 제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농업부문이, 그리고 나 자신이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타 산업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부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농업생산의 비가역성 및 다원적 기능을 제시하곤 했지만, 이를 기초로 한 농업철학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했다. 하지만 연구자라면 농업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및 방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된 농정철학에 입각하여 정책방향이 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특정한 농정철학을 갖고 있거나 농정의 기본방향이 사회적 이슈가 된 외국의 사례는 이러한 단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농정의 기본방향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예는 1990년대 말 광우병 파동으로 농업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당시 광우병의 충격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결과 농업이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최대의 과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농정의 방향 전환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추진되었다. 즉 녹색당 소속의 농림

수산부 장관이 등장하여 독일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으로 전환함에 따라 산업적 효율성보다 우선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농업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스위스의 지속 가능한 농업

특정한 농정철학에 입각하여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지속가능성'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체계적인 식량안보계획의 이행과 가족경영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정업무 담당기관의 목표를 넘어서 국가의 최우선 과업 및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계획은 연방농업청이 아니라 연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연방국토관리청이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실행방안 중 하나인 경종작물재배면적(Fruchtfolgefläche)의 지정과 관리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족경영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스위스의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구성원은 경작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경작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산업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스위스의 가족경영 육성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지속가능한 농업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의 목적이 단지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지 않고, 농업생산공간을 투기대상으로

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경영구조를 정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농업생산공간에서 유래하는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을 유지·발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다원적 기능에 적합한 경영조직이 가족경영일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가족경영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적어도 스위스는 특정한 농정철학 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가족경영이 핵심 요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정철학 단론의 시작

농정철학은 농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가치관 및 이를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경우, 농정철학은 이 시대에 농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한 사회가 건전한 형태로 발전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역할들을 최적격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농업부문은 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른 어느 부문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

농정철학의 출발은 지금까지 외부효과로 간주하여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고, 농정철학의 정착은 새로운 인식에 근거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직까지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하에서 그 가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일은 우리 연구자가 해야 할 과업이고, 그 과업에 대한 이행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정의 패러다임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농정철학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아문제 악화, 세계인구 6명 중 1명꼴로 급증

김태곤 연구위원

세계 기아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기아인구는 10억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성장 후퇴, 곡물과 원자재의 가격 상승 등이 있다. 기아문제가 심각해지는 메커니즘과 처방에 대해 살펴본다.

유엔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기아문제 해소를 선언하였다. 기준연도(1990~92년)의 기아인구 8억 2,300만명을 2015년까지 절반 수준인 4억 1,200만명으로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성장 후퇴와 원자재 가격상승이 문제 악화

실제 기아인구는 1990년대에는 약간이나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 증가로 반전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 기구(FAO)에 의하면 기아인구는 1998~2000년 7억 9,900만명에서 2007년 9억 2,300만명, 2009년 10억 2,00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기아인구인 셈이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아인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로 개도국에 분포하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3명중 1명이 기아인구다.

유엔은 최근 기아문제가 심각해진 요인을 경기후퇴에 의한 소득감소와 실업 등에 의해 식량 확보가 어렵게 되고, 종자·비료·원유 등 자재가격 상승이 생산증대를 제약하여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의 농업보호, 수출국의 수출제한, 세계 금융위기 등도 기아문제를 가속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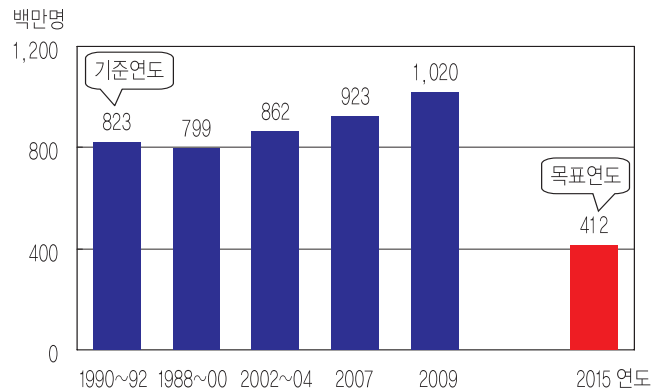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구 평평화'라는 말은 기아문제에도 적용된다. 개도국의 기아문제가 세계 경제에 연동되어 발생한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도국은 공업성장을 우선한 나머지 농업투자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다. 국민이 소비하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 결과 가격상승과 구매력 저하로 기아문제가 악화된 것이다.

선진 수출국의 수출제한도 개도국의 기아를 증가시킨다. 2008년 상반기 세계 식량위기 발생으로 17개국이 수출제한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20여개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하였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가 개도국의 기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의 성장후퇴가 개도국에 대한 농업협력이나 직접적인 식량지원에 소극적으로 작용한다.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우선 식량가격 상승과 기아문제와의 관계를 보자.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개도국의 생산을 자극하여 기아해소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이다.

세계 기아인구 추이



자료 : FAO

식량가격 상승은 식생활 수준이 낮은 빈곤세대에게 보다 심각하게 작용하여 기아를 증가시킨다. 반면에 생산은 크게 늘어나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8년도 세계 곡물생산을 보면 선진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개도국은 0.9% 증가에 그쳤으며, 더구나 브라질·중국·인도를 제외한 개도국은 1.6% 감소하였다. 개도국은 자재, 노동력, 연구·기술, 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생산을 유인하지 못한다.

기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부문에서 가격상승의 기회를 살린 '생산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및 잠재적 기아인구에 대한 사회보장계획과 같은 '세이프티 넷'이다.

농업투자 증대와 사회보장계획이 문제 해결

향후 식량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FAO가 최근 발표한 2009년 농업전망에 의하면 국제가격은 폭등하기 이전인 1997~2006년 평균과 2009~2018년 평균을 비교하면 실질가격으로 30% 정도 상승한다. 또한 FAO는 인구증가와 소득향상, 바이오연료 등에 의해 식량 수요는 향후 30년 이내에 현재의 40%, 50년 이내에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아문제 해소가 긴급한 과제이다. 우선 개도국에서 영세 농가와 조건불리지역의 소득향상과 충분한 투입재 공급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생산증대를 위해 농지와 물의 효율적인 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에 대한 투자조정이 단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R**

6월 주요 농정 동향

쌀 산지 재고량 및 가격 동향

올해 4월말 현재 산지유통업체 쌀 재고량이 1,178천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33.7%, 비RPC농협 66.0%, 민간RPC는 8.7%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작년 수확기 매입량 증가 및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산 생산량이 전년대비 9.9% 증가하면서 매입량이 전년대비 6.6% 증가한데 반해, 소비 감소로 산지유통업체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식생활 변화로 인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2003~08년 사이 8.9% 감소). 올해는 경기 침체 및 높은 쌀 가격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특히 중·고가미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08년산 수매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재고량 누적으로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는 수확기 이후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평년 추세와 반대로, 이러한 역계절 진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쌀 재고 소진으로 인해 올해 쌀 수확기에 햅쌀과 묵은쌀이 동시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단경기 가격 하락 시 수확기 쌀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RPC 등이 매입을 기피할 우려까지 있다. 이에 농업인단체 등은 쌀 소비촉진 캠페인이나 쌀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양곡 방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산지의 재고 일부 물량을 시장격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29개 품목 대표조직 설립·육성

농식품부는 생산액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29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중 쌀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품목의 대표조직 설립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식량 1개(쌀), 채소·특작 9개(고추, 버섯, 배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인삼, 마늘, 양파), 과수·화훼 6개(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백합), 축산 7개(한우, 돼지, 닭, 계란, 우유, 양봉, 오리), 수산 6개(넙치, 전복, 김, 고등어, 멸치, 오징어)의 총 29개이며, 이중 감귤과 넙치는 이미 대표조직이 설립되어 있다.

쌀은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을 생산부문 대표조직으로, 농협RPC운영위원회 등은 가공·유통부문 대표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육성한 후 2010년 상반기에 두 조직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채소·특작분야는 전반적으로 기존 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대표조직이 육성된다. 사과는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전국협

의회를 통합해 가칭 (사)사과연합회로, 양돈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조직으로 각각 육성한다.

대표조직 설립 계획에 대해 농업인단체 등은 농업환경과 경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전국조직을 연내에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양한 여건의 농가나 기존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대표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표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유로 정부가 생산자 단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기존의 품목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조직이 설립될 경우 업계의 조직 난립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기존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경우 그 조직을 대표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쌀, 콩,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값이 주요 생산국의 기상 이변과 소비국가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콩값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콩 1톤 가격이 288달러이던 것이 최근 458달러로 59%나 올랐다.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소비 증가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장립종 주요 생산국인 태국이 수매제도의 영향으로 자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중립종 주요 생산국인 호주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수출국인 호주는 오랜 가뭄으로 수입을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중립종 1톤 가격이 작년 12월에 1,150달러이던 것이 최근 1,225달러로 6.5% 상승했으며, 장립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22달러에서 550달러로 5.4% 상승했다.

밀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이 봄밀 파종기에 가뭄으로 파종이 지연되고 냉해까지 나타나는 등 이상기온으로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 12월 톤당 180달러이던 것이 최근 238달러로 32.2% 상승하였다. 옥수수도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톤당 116달러에서 172달러로 48.3% 올랐다. 작년 애그플레이션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이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 최근들어 다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